

전북도, 고향사랑추진협의체 본격 가동

도·시·군 합동TF, 실국 고향사랑추진단·전문가 자문협의회 운영 연구용역 병행 추진으로 실행력 높은 '전북형 맞춤형' 수립

전북도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 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한다.

도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대비해 도·시·군 합동 TF, 실국 고향사랑추진단 전문가 자문협의회로 구성되는 추진협의체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추진협의체 운영을 통해 고향 사랑기부제 준비단계부터 도와 시·군 상생협력 방안 모색, 전 실·국 역량을 결합한 아이디어 발굴 및 관계 전문가 보안을 통해 특색있는 '전북형 고향사랑기부제'로 정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오는 30일 도와 시·군 공무원과 합동TF 착수 회의를 개최해 선행 사례 특강 및 질의응답을 통해 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향후 추진방향 설명 후 시·군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청 실국 고향사랑추진단도 가동해 협의과제를 발굴할 계획

이다.

추진단은 행정부처를 단장으로 농축수산물 문화·관광, 홍보 부서 등 도 소속 22개 관련 부서가 모금 홍보반, 답례품 지원반 및 기금·제도 연계반 등 3개 실무 분과에 참여한다.

실국 고향사랑추진단은 종합홍보 지원 및 마케팅 전략 수립, 출항인파의 교류체계 확립, 특색있는 답례품 개발·관리, 기금설치 및 활용방안 수립, 전북사랑도민제도와 같은 유사제도 연계 등 '전북형 고향사랑기부제'의 밑그림을 함께 그려가게 된다.

전문가 자문협의회는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전반에 관한 전문과 도·시·군 합동 TF 및 실국 사업추진단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도는 별도 연구용역을 ,학계 및 시민단체 등 전문가 자문도 병행해 고향사랑기부제 실행력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연구용역과 설문조사를 통해 기부

의사 및 답례품 선호도를 조사해 잠재적 기부자 발굴 및 도와 시·군이 상생하는 답례품 구성 방안 등을 정립해 나가고, 여기에 시민단체 등 현장의 자문을 병행해 시행단계에서의 문제점도 미리 점검할 예정이다.

추진협의체와 연구용역 진행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은 지속적으로 상호 공유하고 보완해 실행력이 높은 전북형 고향사랑기부제로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인구유출과 재정악화 등의 악순환으로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지난 2021년 10월 19일 법률이 제정돼 2023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인이 고향 등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금액의 30% 내외

서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한다.

기부금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조성돼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또는 주민 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하게 된다.

올 상반기에 기부금 모금방법, 절차 등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시행령과 조례 표준안이 마련되면, 하반기에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해, 고향사랑기부금 설치 답례품 선정, 종합시스템 구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김미정 도 자치행정국장은 "수도권에 비해 재정여건이 열악한 전북도의 경우,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기부자에 대한 지속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인구유입으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협의체 논의 및 용역 결과를 토대로 도와 시·군이 상생할 수 있는 실행방안을 마련해 내년 도 제도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이달의 새내기 주인공' 선정

사회재난과 환경지·혁신성장정책과 양환경 주무관 활기찬 사무실 분위기 조성·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업무 수행



전북도 사회재난과 환경지·혁신성장정책과 양환경 주무관이 '이달의 새내기 주인공'에 선정됐다.

도는 매월 다른 주제로 '노사가 함께 하는 이달의 혁신주인공'을 선정하고 있는 가운데, 3월에는 신입 직원을 대상으로 주인공을 선정했다.

특히, 이번 달은 낮은 공기 환경 속에서도 잘 적응하고 있는 새내기 공무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2명을 선정했다.

먼저, 환경지 주무관은 활기찬 에너지 발산 및 조직문화 개선 캠페인 실천을 통해 사무실 분위기를 환하게 바꾸고 있을 뿐 아니라, 도민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남다른 사명감으로 시설물들을 꼼꼼하게 점검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또한, 양환경 주무관은 새내기 공무원이라 믿기 힘들 정도로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동료들 사이에서 믿음으로 불리고 있으며, 업무적으로는

전북혁신도시 및 우리 지역 발전 위한 길잡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환경지 주무관은 "과장님,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아꼈던 것이 이상을 받을 수 없었던 거라고 생각된다"며 "부족한 점이 많지만 항상 선배·동료분들의 말씀을 경청하며,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이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양환경 주무관은 "혁신주인공에 추천해주신 최창석 과장님과 부족한 저를 많이 도와주시는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역상생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도, 6.1 지방선거·정부 교체기 공직윤리 특별감찰

5월 31일까지... 권역별 5개반 24명 감찰인력 투입

전북도가 제8회 지방선거 및 정부교체기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해 흐트러질 수 있는 공직윤리를 바로 잡고자 28일부터 선거일 전 5월 31일까지 대대적 특별감찰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는 권역별로 5개반 24명을 투입해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14개 시·군 등을 대상 현장 감찰 활동을 진행한

다.

이번 공직 감찰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 행위, 정부교체기 복무 위반 및 품위 훼손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도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소극적·관례적 업무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특히, 공무원의 선거 관련 SNS 활동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뿐만 아니라, 민원처리 지연 및 방치, 업무 처리 회피 및 불필요한 서류 요구 등 도민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공무원의 소극행정 등을 집중 감찰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감찰 기간 중 적발되는 비리 행위자는 직위 여하를 불문,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처분 계획이다.

또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 행

위, 공직기강 해이 행위, 민원처리 지연 등 도민 권익을 침해하는 소극행정 등에 대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당부했다.

감찰할 도 감사관은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민원처리, 공직윤리 확립 등 신뢰받는 행정으로 청렴하고 부패없는 전북도정 구현에 최선을 노력을 기하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중기 지원 확대 기업하기 좋은 전주로"

유창희 전주시장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유창희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28일 (사)전주시중소기업인연합회(회장 임동욱)와 간담회를 갖고 경영안정자금 지원확대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유 예비후보는 중소기업인들의 고용안정성 향상을 위해 지자체의 행정과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듣고 은행권과 협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대출과 이차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종사자의 고용유지와 고용안정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퇴직연금 지원확대를 약속했다.

유 예비후보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 최저가 낙찰제도 개선, 과도한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개선, 협동조합 추천 소액수의계약 확대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합의 균형을 회복시키고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 제품 제값 받기를 못 받고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실시, 공무원가 변동의 부담을 하도급에 떠넘기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하도급 갑질·기술 탈취 등 불공정거래와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도, '사회적농업 거점농장 육성 사업' 본격 추진

17개 농장주 참여, 기관간 네트워크 확대 논의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적농업 활성화 기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 육성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자 28일 17개 농장주 및 관계 기관이 머리를 맞댔다.

도는 올해 '사회적농업 거점농장 지원 사업'에 완주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가 선정돼 매년 2억 원(3년간 총 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사회적 농업은 사회적 약자가 농업 활동을 통해 불분, 교육, 고용, 힐링

등을 추구하는 개념으로, 최근 농업계에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거점농장은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장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컨설팅, 지역내 네트워크 구축, 마케팅 및 홍보, 교육 연수 프로그램 개발 등을 밀착 지원한다.

이날 행사는 올해 처음 선정된 거점 농장을 소개하고, 도내 사회적농장 지원계획, 유관기관 네트워크 강화 등

거점농장의 활동계획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신규로 선정된 8개 농장은 사회적농업 운영 경험이 풍부한 선배농장과 수시로 소통하며, 애로·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기로 했다.

거점농장에서도 사회적 농장이 안정적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전북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농

장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거점농장 지원사업은 앞으로 새로운 시범사업 발굴, '사회적 농업 특화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전북도가 사회적 농업의 메카로 성장하는데도 특목히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지형 도 농촌활력과장은 "미래농업을 스마트팜처럼 기술농업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함께 사는 농촌을 만드는 것도 미래농업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거점 농장을 중심으로 전북도 사회적농업 성장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일입니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

"데이터 프리 전주로 정보격차 해소"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후보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28일, "휴대전화 요금은 거의 무료로 이용되고 있는데, 무선인터넷망을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 요금이 사용량에 따라 과금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나날이 벌어지는 계층간 디지털 정보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중·고등학교는 무료 와이파이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가 느려 실제로 인터넷 강의 등 수강이 어려워 속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전주시민 누구나 공공 와이파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프리(data free) 전주로' 정보격차 해소와 학습여건을 개선하고, '데이터 요금의 댕'이라고까지 표현되는 횡당요금 해결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원)도심과 대중교통, 중고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전주시의 공공생활권 전역으로 확대하여 보편적 통신복지 실현과 함께 통신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 발전 축 가로막는 북부권 철로 이설"

임정엽 전주시장 출마예정자

전주시장 출마예정인 임정엽 전 완주군수는 선형 변경을 앞두고 있는 삼례-전주역 간 철로를 이설해 북부권 주민들의 도시환경 문제와 고질적 교통난을 해소하겠다고 공약했다.

임정엽 전 군수는 28일 전주시청에서 열린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35년간 임실 이전 이후로 전주 북부권의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돼 송천동 일대에 15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예로시타에 이미 3만 6,000여 명이 입주한 데 이어 향후에도 북부권 철로 일대에 1만 1,800여 세대가 지속적으로 입주할 예정"이라며 철로 이설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완주 삼봉지구에서도 동부대로를 타고 전주로 넘어올 인구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진단하고 "이 일대의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선형을 도심권에서 멀리 떨어지도록 우회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토교통부가 계획하고 있는 삼례와 전주역 간 철로 직선화 방안은 사업비를 줄이는데 매달린 나머지 전 주발전의 미래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이미 도심권에 편입된 예코 시티 일대를 관통하지 않고 북쪽으로 우회시키면서 직선화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임 전 군수는 "전주권 구간 공사비는 국비로 추진되기 때문에 전주시장으로서 당연히 협의의 조정에 나서야 한다"면서 "시민들이 시장으로 선택해주신다면 취임 즉시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답판을 짓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